

위증범죄 양형기준안

양형위원회

I. 특징

- 유형 분류를 통하여 형량범위를 세분화
 - 형법 규정에 따라 위증과 모해위증으로 유형 분류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은 모해위증에 준하여 취급
 -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상표법상 위증은 위증에 준하여 취급
- 다른 양형기준안에서와 동일한 방식에 의한 양형인자의 구분 및 복수 양형인자의 평가원칙을 유지
 - 가중/감경인자와 특별/일반인자로 구분
 - 복수의 특별인자 평가를 위한 구체적 원칙 제시
- 형량범위 설정에 있어 규범적 조정을 반영
 - 적정한 기본영역 제시와 균형 있는 가중, 감경영역 설정
 - 국민참여재판, 공판중심주의의 정착을 위해 형량을 규범적으로 상향 조정
- 집행유예의 일반적 기준 제시
 - 긍정적/부정적 참작사유와 주요/일반 참작사유로 구분
 - 복수 집행유예 결정인자의 평가원칙 제시

II. 대상범죄

1. 대상범죄 선정 시 고려 사항

○ 기술적 및 규범적 접근방식

- 양형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과거 양형실무를 분석하고 이를 전형화하여 양형기준에 반영하는 ‘기술적 접근방식’을 원칙으로 하면서 필요한 경우 이론적·정책적 측면에서 과거 양형실무를 조정하는 ‘규범적 접근방식’을 병행하는 것이 타당함

○ 범죄의 전형성

- 양형기준은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범죄를 위주로 우선 설정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고 예외적으로 발생하는 특수한 범죄의 경우 양형기준의 설정 필요성이 시급하지 않음

2. 위증범죄 일반

가. 형법상 위증 규정

○ 위증

- ☞ 형법 제152조 제1항 :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모해위증

- ☞ 형법 제152조 제2항 :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 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자수, 자백의 필요적 감면

- ☞ 형법 제153조 : 전 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 허위 감정, 통역, 번역에의 준용

☞ 형법 제154조 :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허위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한 때에는 전 2조의 예에 의한다.

나. 특별법상 위증 규정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회증언법'이라 한다)

☞ 국회증언법 제14조 : ① 이 법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백은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종료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상표법

☞ 특허법 제226조 : ①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감정 또는 통역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죄를 범한 자가 그 사건의 심결의 확정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실용신안법 제46조 : ① 제33조 및 「특허법」 제1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선서한 증인·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감정 또는 통역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죄를 범한 자가 그 사건의 심결의 확정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의장법 제83조 : ①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 · 감정 또는 통역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죄를 범한 자가 그 사건의 의장등록 여부결정 · 의장무심사등록이의결정 또는 심결의 확정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상표법 제94조 : ①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 · 감정 또는 통역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죄를 범한 자가 그 사건의 상표등록 여부결정 또는 심결의 확정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국가보안법

☞ 국가보안법 제12조 : 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자는 그 각 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②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 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다. 형법상 증거인멸 규정

○ 증거인멸

☞ 형법 제155조 제1항 :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형법 제155조 제2항 :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 모해증거인멸

- ☞ 형법 제155조 제3항 :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 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관련 통계

- 지난 4년 동안 사건의 빈도 수(경합범으로 기소된 경우를 포함)는 아래와 같음

출처 :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실

순 번	죄 명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합 계	평 균
1	위증	716	780	815	1,068	3,379	844.8
2	모해위증	21	21	9	5	56	14
합 계		737	801	824	1,073	3,435	858.8

4. 위증범죄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위

- 형법상의 위증, 모해위증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는 데 별 이견이 없을 것임
- 국회증언법상의 위증의 경우 사건 수가 너무 적어 개별 범죄의 특성(형량범위, 양형인자 및 그 영향의 정도)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위증이라는 점에서는 형법상의 위증과 다를 바 없고, 단지 그 장소와 절차가 국회에서의 안전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되었다는 점

에서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데에 불과하므로 형법상의 위증에 준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함

-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상표법상의 위증의 경우 역시 사건수가 너무 적어 개별 범죄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으나 형법상의 위증과 법정형이 동일한데도 굳이 위와 같은 별도의 규정을 둔 이유는 자수, 자백의 필요적 감면에 관한 규정인 형법 제153조에 대한 특별규정을 두기 위한 취지로 보이므로 양형기준은 형법상의 위증에 준하여 설정할 수 있음
- 국가보안법상의 위증에 관하여 보면, 먼저 국가보안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은 국가보안법위반죄의 성격,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한다는 목적 등에 초점을 맞추어 응보적인 형벌을 과하고자 하는 특이한 규정으로서 위증죄에 관한 일반적인 양형기준에서 포섭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같은 조 제2항 역시 직권남용에 초점을 맞춘 규정으로서 위증죄에 관한 일반적인 양형기준에서 포섭하기가 어려워 보임
- 형법상 증거인멸 또는 모해증거인멸의 경우 위증죄와 같은 장에 규정되어 있고(형법 제10장의 제목이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임) 양자 모두 사법작용에 대한 국가의 기능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기는 하지만 증거인멸은 유형적인 방법으로 물적 또는 인적 증거를 인멸 또는 은닉하여 증거의 증명력을 해하는 범죄인 반면, 위증은 증인의 허위의 진술 등 무형적인 방법으로 증거의 증명력을 해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양자는 서로 성격이 다르며 양형인자에서도 차이가 남
- 따라서 위증죄의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는 형법상의 위증, 모해

위증, 국회증언법상의 위증,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상표법
상의 위증으로 한정함

III. 범죄유형 분류

1. 필요성

- 위증범죄 양형기준 설정 대상이 되는 형법 및 특별법상 범죄의
법정형은 아래와 같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죄 명	적용법조	법정형
위증	형법 제152조 제1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모해위증	형법 제152조 제2항	10년 이하 징역
국회에서의 위증	국회증언법 제14조 제1항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특허법 관련 위증	특허법 제226조 제1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실용신안법 관련 위증	실용신안법 제46조 제1항	"
의장법 관련 위증	의장법 제83조 제1항	"
상표법 관련 위증	상표법 제94조 제1항	"

- 각 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유형 분류를 통해 처단형의 범위를 합리
적으로 구분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2. 비교법적 검토

가. 미국 연방

- 위증죄(Perjury)와 사법방해죄(Obstruction of Justice)를 규율

○ 미국 연방법 제18편 제79장 제1621조는 위증죄를 규정

- 연방법률에 따라 선서 후 증언을 청취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 받은 공기관 앞에서 ‘선서(oath)’한 증인이 허위진술한 경우

○ 미국 연방법 제18편 제73장 제1503조는 사법방해죄를 규정

- 사법절차가 계속 중임을 알고도 사법절차를 방해하였거나 방해할 고의를 가지고 피고인이 부정하게 행위하였을 경우에 성립

○ 연방 양형기준에 따른 양형은 다음과 같음

USSG 2J1.2, 2J1.3

- ▶ 기본 범죄등급 : 14(15월 ~ 21개월)
- ▶ 가중 규정
 - 위증 또는 사법방해를 목적으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야기하거나 이에 관한 위협을 수반한 경우 : 8등급 가중
 - 위증 또는 사법방해로 인해 법집행에 심각한 방해가 초래된 경우 : 3등급 가중

나. 영국

○ 위증(perjury)

- 누구든지 사법절차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거짓임을 알면서 또는 진실이 아니라고 믿으면서 허위로 증언을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함¹⁾(Perjury Act 1911, s.1)
- 선고형 사례

Roskill 판사가 Davis 사건(1974)²⁾에서 위증범은 반드시 처벌되어야 한다는 양형 기준을 제시한 이래 대부분의 위증범은 거의 구

1) 원문은 다음과 같다--“If any person lawfully sworn as a witness or as an interpreter in a judicial proceeding willfully makes a statement material in that proceeding, which he knows to be false or does not believe to be true, he shall be guilty of perjury, and shall, on conviction thereof on indictment, be liable to imprisonment and fine”

2) (1974) 59 Cr App R 311 at p.313

금형에 처해진다고 함

- (1) Hall case(1982)³⁾: 폭행치상사건을 심리하는 magistrates' court 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62세 된 노파가 범인의 알리바이에 관하여 위증을 한 사건에 관하여 항소법원의 Talbot 판사는 법관의 면전에서 고의적인 위증은 사법절차의 근본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3개월 밑으로의 구금형은 도저히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다만 피고인이 노파인 점을 고려하여 3개월의 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였음
- (2) Lewins case(1979) : 경찰관인 피고인이 자신이 낸 음주 교통사고 사건에서 증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음주한 시점은 사고후라고 위증할 것을 교사한 사건. 항소법원은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피고인이 위 일로 실직을 하였고, 경찰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교사한 것이 아님을 들어 2년으로 감경하여 선고하였음
- (3) Knight case(1984)⁴⁾: 750,000파운드(약 13억 5000만 원 정도)를 털 무장강도 형사사건에서 위증을 한 사건. 항소법원은 피고인의 전력, 나이, 환경 등과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하여 3년의 형이 적절하다고 판시하였음

다. 독일

○ 위증죄

- 법원 또는 선서를 행하게 할 권한이 있는 관청에 대하여 위증한 경우

⇒ 1년 이상 자유형⁵⁾

○ 선서 없는 허위진술

3) (1982) 4 Cr App R (S) 153

4) (1984) 6 Cr App R (S) 31

5) 독일 형법 제154조 제1항. 동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행위가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하도록 규정

- 법원 또는 선서에 의한 증언이나 감정을 행하게 할 권한이 있는 관청에 대하여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서 선서 없이 허위 진술한 경우

⇒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⁶⁾

○ 위증 교사

- 타인에 대하여 위증을 교사한 경우

⇒ 2년 이하 자유형 또는 벌금형⁷⁾

라. 프랑스

○ 일반 위증

- 모든 재판기관 또는 수사촉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사법경찰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위증한 경우

⇒ 5년 이하 구금형, 75,000유로 이하 벌금형⁸⁾

○ 가중 위증

- 대가를 받고 위증한 경우 또는 위증이 이루어진 사건이 중죄의 형에 처해진 경우

⇒ 7년 이하 구금형, 100,000유로 이하 벌금형⁹⁾

6) 독일 형법 제153조 제1항

7) 독일 형법 제160조 제1항

8) 프랑스 형법 제434-13조

9) 프랑스 형법 제434-14조

3. 범죄유형화의 시도

가. 선고형 분포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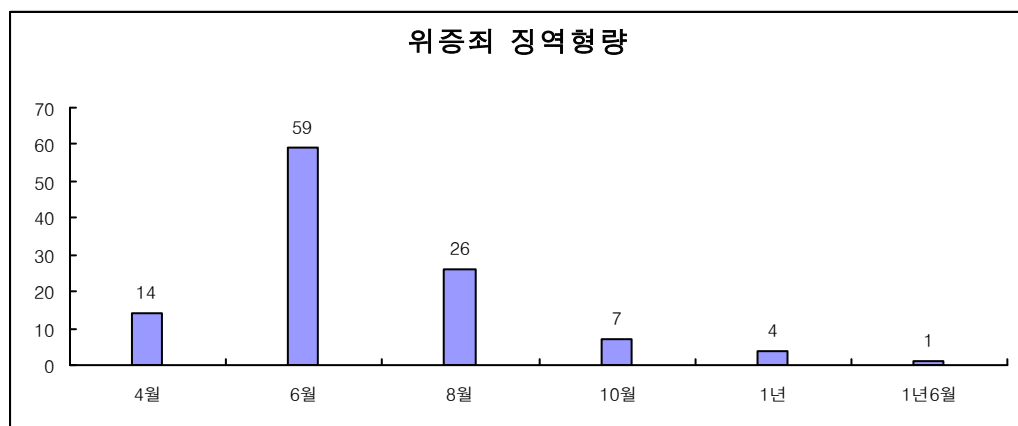
○ 형종 분포

	형종(1심)				전체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선고유예	
위증	22	89	60	—	171
	12.9%	52.0%	35.1%	—	100.0%
모해위증	12	20	—	2	34
	35.3%	58.8%	—	5.9%	100.0%

○ 형량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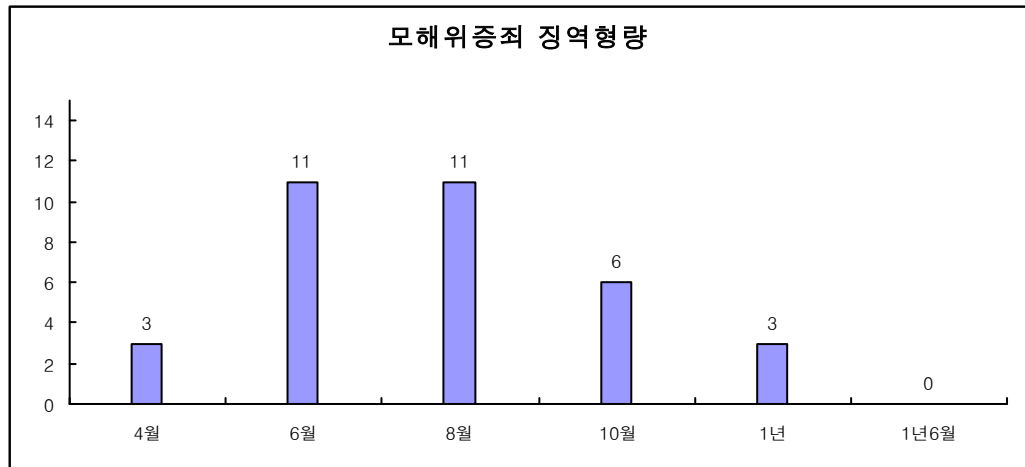
	징역형량 ¹¹⁾									전체
	2월	3월	4월	5월	6월	8월	10월	1년	1년6월	
위증	—	1	13	1	58	26	7	4	1	111
모해위증	2	—	1	—	11	11	6	3	—	34

- 징역형량(평균) : 위증 6.8개월, 모해위증 7.6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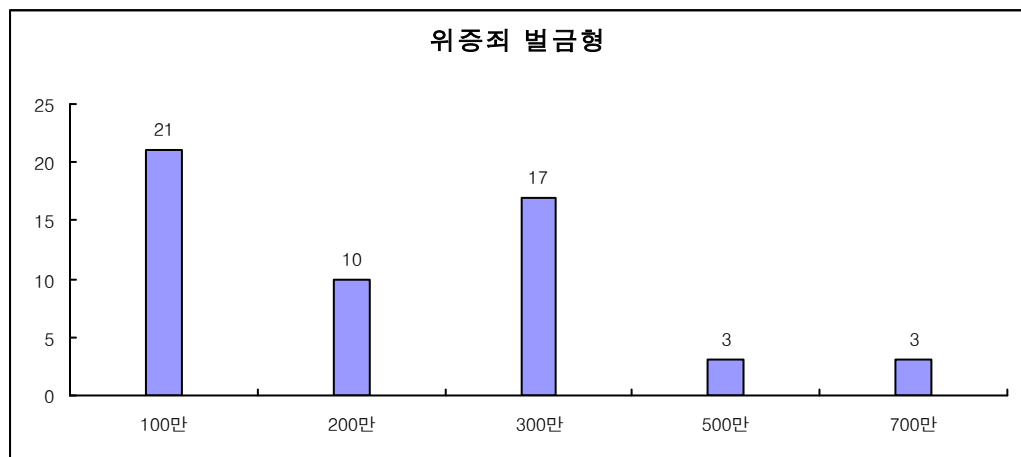
10) 모해위증 사건은 운영지원단에 별도로 요청한 통계자료에 근거한 것임

11) 실형과 집행유예, 선고유예를 합한 통계임



	벌금액												전체
	20만	30만	50만	70만	100만	150만	200만	250만	300만	400만	500만	700만	
위증	1	1	3	4	12	6	10	2	15	1	2	3	60

- 벌금액(평균) : 위증 218만 원



나. 유형화 기준

- 형법에서 위증 외에 모해위증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모해위증을 특별히 가중처벌하겠다는 입법자의 의도를 반영하기 위한 취지임
- 따라서 기본적으로 위증과 모해위증을 구분하여 유형화를 시도하는 것이 타당함
 - ☞ 위증과 모해위증의 법정형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
 - ☞ 양자는 평균형량에 있어 미미하기는 하지만 차이를 보이고 있고(위증 : 6.8개월, 모해위증 : 7.6개월), 징역형 중 집행유예(선고유예 포함) 비율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위증 : 80.2%, 모해위증 : 64.7%)
 - ☞ 모해위증은 위증과 달리 법정형으로 벌금형은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음
- 국회에서의 위증은 모해위증과 형량의 상한이 같으므로(하한이 징역 1년 이상으로 되어 있지만 작량감경하면 징역 6월부터 가능함) 모해위증에 준하여 취급하도록 함
-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상표법 관련 위증은 그 성질이 형법상 위증과 동일하므로 형법상 위증에 준하여 취급하도록 함
- 위증과 모해위증으로 유형구분을 하지 않을 경우 그 대안으로는 ① 위증이 요증사실 혹은 소송의 실체에 관련된 중요사항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부수적이거나 사소한 사항에 관한 것인지에 따라 구분하는 방안, ②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하는 방안 등이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으로서의 명확성이 결여되거나 별도의 유형구분이 가능할 정도로 책임의 경중에 차이를 가져온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IV. 형량범위 설정

1. 형량범위 설정시 고려사항

가. 경험적 분석

- 과거 선고형 중 약 70% ~ 80%에 해당하는 형량을 반영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함
 - ☞ 위증죄의 경우 형량폭이 좁아 해당 유형에 속하는 범죄를 충분히 포섭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약 80%로 상향
- 약 80%의 형량을 포섭하는 경우 위증죄의 유형별 형량은 아래와 같음

유 형	형량범위
제1유형(위증)	징역 4월 ~ 징역 10월
제2유형(모해위증)	징역 6월 ~ 징역 10월

나. 규범적 조정

- 위증죄에 대한 그 동안의 양형은 위증죄의 입법취지나 보호법익의 중요성에 비추어 지나치게 관대하였다는 지적이 많았음
- 위증죄가 기본적으로 재판작용의 적정성을 해치는 범죄로서의 성격을 가짐에도 그로 인해 개인의 권리나 법익 침해가 초래되지 않았을 경우 상대적으로 가볍게 취급되어 온 점, 개인간의 사적 관계에서 위증 여부를 판명하기가 쉽지 않은 점, 전통적으로 의리나 인정에 얽매여 쉽게 위증을 하여 온 사정을 무시하기 어려운 점 등이 양형을 관대하게 하는 이유로 지적되고 있음
- 그러나 위증죄는 재판기관으로 하여금 적정한 증거의 이용을

어렵게 하고 판단을 그르치게 함으로써 실제적 진실발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재판작용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게 하는 범죄로서 생각보다 폐해가 막심함

-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에 비하여 위증죄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최근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 국민참여재판 및 공판중심주의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위증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
- 이와 같은 상황에서 위증죄의 양형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기술적 접근방법으로만 일관할 경우 과거의 양형실무를 그대로 반영하는 결과가 되어 양형실무를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규범적 조정을 기할 필요가 있음

다. 유형별 형량범위의 세분화

- 처단형을 세분화하여 양형기준의 지침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형별 형량범위를 나눌 필요가 있음
- 각 유형별로 3단계 형량범위를 제시함
 - 감경/기본/가중

라. 유형별 형량범위의 중첩

- 개별양형인자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살인죄 양형기준안과 같이 형량범위의 중첩을 허용함

2. 형량범위(안)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제1유형 (위증)	- 10월	6월 - 1년6월	10월 - 3년
제2유형 (모해위증)	6월 - 1년6월	10월 - 2년	1년6월 - 4년

[유형 구분에 따른 형량 영역 표시]

구 분		0	1	2	3	4	5	6	7	8	9	10
1 유형	감경											
	기본											
	가중											
2 유형	감경											
	기본											
	가중											

V. 양형인자의 결정

1. 양형인자 추출

가. 추출 원칙

- 각종 양형요소와 징역형 형량 사이에 상관관계 분석과 회귀분석 등을 진행하여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추출
- 그 외 규범적 관점에서 입법자의 의사, 피해자 보호 등 형사정책적 고려, 국민의 법감정 등을 종합하여 양형인자 추출

나. 양형인자 추출 결과

(1) 특별양형인자

- 경험적 수치에 의한 특별양형인자
 -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 규범적 관점에 의한 특별양형인자
 - 법률상 가중·감경사유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농아자, 심신미약, 자수·자백, 동종 누범
 - 기타 : 위증이 지엽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중요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 우발적 범행, 경제적 대가의 수수

(2) 일반양형인자

- 경험적 수치에 의한 일반양형인자
 - 없음
- 규범적 관점에 의한 일반양형인자
 - 제반 사정에 비추어 증언의 신뢰성이 극히 낮은 경우, 소극가담, 미필적 고의, 허위 증언이지만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같은 심급에서 변론기일을 달리하여 수회 위증한 경우, 위증을 교사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자백), 처벌불원, 이중 누범 및 동종 전과

2. 양형인자 정리

구 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위증이 지엽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중요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 우발적 범행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경제적 대가의 수수,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행위자 /기타	농아자, 심신미약, 자수·자백	동종 누범(증거인멸, 범인은닉, 무고 등 포함)
일반 양형 인자	행위	제반 사정에 비추어 증언의 신뢰성이 극히 낮은 경우, 소극가담, 미필적 고의, 허위 증언이지만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같은 심급에서 변론기일을 달리하여 수회 위증한 경우, 위증을 교사한 경우
	행위자 /기타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자백),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누범이 아닌 동종 전과(증거인멸, 범인은닉, 무고 등 포함) 이중 누범

VI. 집행유예 기준

1. 집행유예 참작사유 추출

- 각종 양형요소와 징역형의 집행 여부 사이에 교차분석, 상관분석 등을 실시하여 그 분석결과에 규범적 조정을 가미한 것을 토대로 형법 제5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유예 결정시 참작할 사유를 아래와 같이 추출

2. 집행유예 참작사유 정리

구 분	부 정 적	긍 정 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전과 ○ 경제적 대가의 수수 ○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 모해 목적이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저한 개선의 정(자수, 자백 등) ○ 소극가담 ○ 우발적 범행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전과가 없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VII. 위증범죄 양형기준안

[적용범위]

위증범죄의 양형기준은 형법상의 위증죄(형법 제152조 제1항), 모해 위증죄(형법 제152조 제2항),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의 위증죄(위 법 제14조 제1항), 특허법상의 위증죄(위 법 제226조 제1항), 실용신안법상의 위증죄(위 법 제46조 제1항), 의장법상의 위증죄(위 법 제83조 제1항), 상표법상의 위증죄(위 법 제94조 제1항)를 저지른 성인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형종 및 형량의 기준]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제1유형(위증)	- 10월	6월 - 1년6월	10월 - 3년
제2유형(모해위증)	6월 - 1년6월	10월 - 2년	1년6월 - 4년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은 제2유형에 준하여 처벌
-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상표법상 위증은 제1유형에 준하여 처벌

구 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위증이 지엽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중요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 우발적 범행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경제적 대가의 수수,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행위자 /기타	농아자, 심신미약, 자수·자백	동종 누범(증거인멸, 범인은닉, 무고 등 포함)
일반 양형 인자	행위	제반 사정에 비추어 증언의 신뢰성이 극히 낮은 경우, 소극가담, 미필적 고의, 허위 증언이지만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같은 심급에서 변론기일을 달리하여 수회 위증한 경우, 위증을 교사한 경우
	행위자 /기타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자백),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누범이 아닌 동종 전과(증거인멸, 범인은닉, 무고 등 포함) 이중 누범

[공통 원칙]

1.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의 특별 조정

-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이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처단형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이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처단형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에 의한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의한 처단형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유형의 정의]

1. 제1유형 : 위증

-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서 제2 유형에 속하지 않는 범행을 의미한다.

2. 제2유형 : 모해위증

-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양형인자의 정의]

1. 위증이 지엽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중요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

- 위증의 내용이 요증사실 또는 소송의 실체에 관련된 사항이 아닌 부수적이거나 사소한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일방 당사자의 유일한 증거인 경우
 - 일방 당사자의 입증에 있어 중요한 증거방법인 경우

2. 우발적 범행

- 미리 계획한 바에 따라 위증을 한 경우가 아니라 법정에서 상대방이나 재판장 등으로부터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을 받고 순간적으로 위증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

3. 자수 · 자백

- 자수의 경우에는 시기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자백의 경우에는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할 것을 요한다.

4. 제반 사정에 비추어 증언의 신뢰성이 극히 낮은 경우

- 증언자의 학력 · 연령 · 증언 내용 · 당사자와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그 증언의 신뢰성이 극히 낮은 것으로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경우를 의미한다.

5. 소극가담

-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함이 없이 수동적으로만 참여하거나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6. 미필적 고의

- 증인신문사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거나 신문사항에 관한 기억이 분명하지 않음에도 단정적으로 답변하는 등 자신의 진술이 자신의 기억에 반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 위증한 경우를 의미한다.

7. 진지한 반성(자백)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특별감경인자로서의 자백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 위증으로 인해 형사사건에서 당사자가 구속되거나 유·무죄 또는 양형판단에 영향을 미친 경우, 민사사건에서 소송의 승패 또는 부분적 쟁점사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경우 등을 의미한다.

9. 같은 심급에서 변론기일을 달리하여 수회 위증한 경우

- 같은 심급에서 최초 한 선서의 효력이 유지된 상태로 변론기일을 달리하여 수차 증인으로 나가 수 개의 허위진술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① 같은 숫자의 행위적 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적/기타 인자보다 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 ② 같은 숫자의 행위적 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적/기타 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에서, 감경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에서,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에서 선고형을 정할 것을 권고한다.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집행유예 기준]

구 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전과 ○ 경제적 대가의 수수 ○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 모해 목적이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저한 개선의 정(자수, 자백 등) ○ 소극가담 ○ 우발적 범행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전과가 없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복수 집행유예 결정인자의 평가 원칙]

- ①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 참작사유는 일반 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 ② 주요 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 긍정사유가 주요 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 ③ 주요 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 부정사유가 주요 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 ④ 위 ② 또는 ③에 해당하나 일반사유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이거나, 위 ② 또는 ③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